

“윤석열·국민의 힘, 노조법 개정 방해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국회 통과 투쟁 선포 ... “여전히 노동자 집 보증금 가압류 현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노조법 개정안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하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등은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돌입·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대전 빈들공동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나는 법정 투쟁으로 확보한 노동자 지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재영 공동대표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주장은 시간을 끌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키려는 잔인한 작태이다”라면서 “민주당이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축소나



중재안 없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8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투쟁 중인 우리 지회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착취를 당했다”라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면 헌법 상 노동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유타칼하이테크지회장은 “일본 닛토덴코 자본이 지난 열 달 동안 고용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공장을 지킨 노동자 다섯 명의 집 보증금 2억 원을 가압류했다”라면서 “이것이 현실이다.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

정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분노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운동본부는 ▲여론 왜곡 윤석열 정부, 국민의 힘, 경영계 맞서 언론매체 연속기고, 11일부터 라디오광고, SNS광고 등 여론전 전개 ▲각 당 대표·원내대표 면

담 추진 ▲6일부터 천막농성, 18일부터 촛불문화제, 9월 20일~21일 금속노조 결의대회·1박 2일 국회 농성 ▲국회의원 문자보내기 등 실천 행동·선전전 등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윤석열의 거부권 저지 10월 초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2023년 정기국회를 개원한 지금까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동본부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행정, 노동자 괴롭혀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상습 지연 규탄 기자회견 ... “공단, 불승인 근거 찾느라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를 두 달 이내에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120일을 이상 끌고 있어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9월 6일 오후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처리 기간 단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상습 지연 행정을 규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1년 8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근골격계질환 처리 기간을 두 달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재 최종 산재 판정까지 120일 이상이 걸렸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조기 치료를 통한 재활과 업무 복귀 등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질환 추정 원칙을 2022년에 도입했다” 라면서 “2022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은 12,491건인데 추정의 원칙 적용은 500건도 안 된다” 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일하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고 있다” 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아프고 병든 노동자들이 신속·공정한 보상,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와 사회로 복귀하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할 근본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서라” 라고 촉구했다.



윤덕기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직업성 질환 평균 산재처리 기간 172일 이상, 근골격계질환 평균 121일 이상 등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를 상습 지연한다” 라며 “이 기간 사업주들은 산재 요양 신청 노동자 징계와 불이익 처분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윤덕기 국장은 “2021년 금속노조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 결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를 두 달 안에 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라면서

“여전히 불승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복잡한 절차들로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공단 측에 대책 세우고 촉구했다. 공단은 산재처리 현황과 처리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공단의 답변을 참고해 요구안을 만들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미비한 대책을 제시하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